

제13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3.11.21(화)~11.23(목) 18:00~02: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지, 노르웨이 등 약 40명
- (의장) Mr. Björn Åsgård(스웨덴)

□ 주요내용

1. IUU 근절 권고안

- (논의배경)
 - 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OECD 법적 도구 개발 필요성 제기(제130차 COFI) 후, 비구속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제131차 COFI)
 - 권고안 초안 워크숍('23.9) 논의와 이후 회원국 수정의견을 토대로 사무국이 준비한 수정 버전에 대해 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함

IUU 근절에 관한 권고* 주요내용

* 원제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의 근절에 관한 이사회 권고

- 1) 보조금을 주는 국가에 등록되고 적법한 허가를 받은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개인 또는 회사에게만 지원을 제공
- 2) IUU 어업 및 IUU 어업 관련 활동 관여자들에게 지원을 철회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집행
- 3) 국내 당국, 권고 당사국 및 RFMO/A들과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수립 또는 강화
- 4) IUU 어업 및 IUU 어업 관련 활동을 장려할 위험이 있는 정책으로 어업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
- 5)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어업 외 다른 부문들을 함께 지원하는 불특정 지원이 IUU 어업 및 IUU 어업 관련 활동을 비의도적으로 장려할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

○ (주요의견)

구분	의견
일본	① 일본에서는 허가 획득 없이 조업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법한 허가' 대신 '정당한 권리'로 수정 원함 ② 불법어선도 일단은 입항시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입항거부' 삭제 원함 ③ 불특정 지원의 어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특정 지원을 권고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일반적 지원(EU 제안)'으로 수정 원함
노르웨이	① 'IUU' 용어 의미에 대한 해석이 회원국별로 상이하므로 동 용어 사용 범위에 우려
뉴질랜드	① '불특정 지원'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도 있으므로 삭제에 반대 ② 권고에서는 IUU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IUU 용어에 대한 회원국별 상이한 해석은 문제되지 않음
EC	① IUU 어업과 비규제 공해어업은 다르므로 구분 필요 ② 불특정 지원을 권고 대상에서 삭제 또는 '일반적 지원'으로 수정 원함
캐나다	① 규제되지 않은 어업이 바로 IUU 어업은 아니어도 불확실성이 있음 ② 불특정 지원에 대해 위험기반 접근 필요
호주	① 불특정 지원 영향 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where practicable)' 용어 추가 제안
영국	① '일반적 지원'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해석이 넓어질 우려
미국	① 불특정 지원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삭제 원함
한국	① 금지되는 보조금과 금지되지 않는 보조금을 각주로 명시 제안 ② 불특정 지원을 권고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어떤 종류의 지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려 필요
사무국	① 비구속적인 문서이므로 구속적인 문서들과 범위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② '불특정 지원' 대신 '일반적 지원'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범위 확대로 권고가 비현실적이 될 우려 ③ 사회복지제도 등의 IUU 어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라는 의도가 아니며, 비구속적인 지침이므로 권고 채택으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자국의 맥락에서 재량적으로 적용 가능 ④ 향후 필요시 타 위원회 권고들과 동일하게 본 권고 개정 가능

○ (논의결과)

- 사무국이 회원국 수정의견을 종합한 수정 버전을 내년 초에 회람하고 회기간 서면 절차로 채택 진행

2. 수산위원회 업무예산계획(PWB)

○ (논의배경) 향후 수산위원회 예산을 투입할 작업 방향을 논의

○ (주요의견)

구분	의견
호주	① 양식업에 작업 우선순위 두길 원함 ② 다른 기구들에서 하는 작업과 중복 방지 필요 ③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지표 개발, 텍스트 협상은 지양
EC	① Review of Fisheries(COFI 수산업 동향)에 초점 필요 ② 데이터 수집, 측정, 분석하여 모범관행 공유 필요
뉴질랜드	① FSE(Fisheries Support Estimate)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필요 ② 현재 진행 중인 선박 소유 투명성에 관한 작업 외 자국민 통제에 관한 작업을 제안
일본	① Review of Fisheries를 우선순위로 둘 필요 ② IUU 권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논의하고 권고 채택 필요
미국	① 포획어업, 양식업, 기후변화에 작업 우선순위 두길 원함 ② FSE 데이터베이스에 양식업 추가 원함 ③ 타 기구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 작업들을 살펴본 후 본 기구에서 할 수 있는 작업 검토 필요 ④ 곧 발간될 해양경제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 (논의결과) 사무국이 연말까지 회원국 서면 의견을 종합하여 PWB 공식문서를 준비한 후 차기 회의(24.5)에서 논의하여 문서 채택

3. 차기 의장단 구성

○ (의장) 미국(Ms. Rebecca Wintering)

○ (부의장) EC,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영국

부록 A.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또는 공해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절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5조 b)항을 **고려하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 이행 분야에서 OECD에 의해 개발된 표준들과, 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감시 및 분석에 관한 경험들, 특히 OECD 수산동향 및 수산 지원 평가(FSE)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근절 분야에서 OECD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들을 **고려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IUU 어업에 대한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행동계획(IPOA-IUU) 그리고 전제 및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자발적 지침,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방지, 억제,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조치협정(PSMA), 수산보조금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을 방지, 억제, 근절하기 위한 다른 국제기구들과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들(RFMO/As)에 의해 개발된 표준들과 이루어진 작업들을 **고려하고**;

IPOA-IUU에 설명된 IUU 어업이 어업의 지속가능성, 해양경제와 연안공동체 생계를 심각하게 훼손 및 위협하고; 증거 기반 어업관리를 뒷받침하는 자원평가를 복잡하게 하며; 준법 조업하는 어업인들을 자원에 관해 그리고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게 하고; 지역 수산물에 의존하는 공동체 및 지역 내 시장으로 수산물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식량안보를 위협하며; 불법 상품 라벨 오류로 인한 식품 안전 리스크를 야기하고; 희소한 자원과 분쟁 해역을 둘러싼 갈등, 초국가적 범죄, 그리고 강제노동의 착취와 관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며**;

PSMA에서 설명된 전제, 선원 교대, 급유, 물자 공급과 같은 어업 관련 활동이 IUU 어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전제에 대한 규율을 설계 또는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한 최근의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어업 관련 활동이 어업 활동 자체보다 규율이 약하고 감시 및 제재하기가 어려움을 **고려하고**;

RFMO/A의 관할 범위 밖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협력적 규율이 대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며**;

OECD 수산 지원 평가(FSE) 데이터베이스에서 설명된 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개,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명시된 수산 부문 내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 수산보조금 지원과, 인프라 투자 또는 외국해역 입어로 지불과 같은 수산 부문 전체 또는 일부에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상이한 유형의 수산업 지원이 비의도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혜택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연구 또는 관리, 감시, 감독, 통제에 대한 공공투자와 같은 일부 유형의 수산 지원정책은 특정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수산 지원정책들은 본 권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며**;

지역 개발 및 재난구호, 불특정 면세유와 같이 다른 경제 부문들과 함께 수산 부문에 혜택을 주는 불특정 지원정책들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비의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또한 **고려하고**;

수산업에 혜택을 주는 불특정 지원정책들이 수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이외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동 정책을 수산 부문 내 특정 개인 및 기업들과 연결하는 것이 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며**;

특정 수산 지원정책들의 지속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 특히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혜택을 줄 위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신흥국들의 경우, 효과적인 어업관리 및 감시를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국제협력으로 이 국가들의 IUU 대응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음을 **고려하며**;

본 권고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이하 “지지국들”)은 상이한 법제도들을 통해 본 권고를 이행함을 **인식하고**;

지원정책 수행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 책임 하에 이루어지지만, 모든 단계의 정부에서 공유되는 책임이고, 이에 따라 본 권고는 각 국가의 법제도 내에서 모든 단계의 정부와 관련되는 책임을 **인식하며**,

수산위원회 제안에 대해:

I. 지지국들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또는 비규제 공해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근절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지지국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지국을 선적국으로 두고 있는 선박을 소유 및 운항하고, 등록 및 허가 절차들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하고, 가능할 경우, 선박 고유 식별 표시를 사용하고, 선박의 이익 향유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과 연결된[의심되거나 관여된] 이익 향유자

들에 대한 정부의 (사전) 수산 지원을 실효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들을 실행:

- 국내 법령에 IUU 선박 등재, IUU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과 관련된 법적 절차, 또는 국내법 또는 RFMO/A 보존관리조치 위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지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배제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발생한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포함하여, 지원 관련 제재에 있어서 비례성을 보장;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여한 자들에게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항구 사용과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금지[- 또는 검색을 위해서만 입항을 허용] [또는: (검색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3. [비규제 공해상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의 수산 지원을 명시적으로 배제]

4. 다음과 관련한 비밀보호 요구사항들과 관련 절차들을 고려하면서, 관련 국내 당국 및 지지국들과 RFMO/A들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수립 또는 강화: (i) 수산 지원의 개별 수혜자들; (ii) IUU 조사 및 판정; (iii) 심각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이 증명된 사건들에서 선박(들)의 실질적인 소유주 및 운항자들.

5.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들을 장려할 위험이 있는 정책들을 통해 정부의 수산 지원 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

- 지원 유형, 정책 설계, 지원받는 어업의 관리 수준, 지원받는 어업에서 수확되는 자원의 상태를 고려하는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개별 수산 지원정책들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비의도적인 혜택을 줄 가능성을 평가;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비의도적인 혜택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감축 또는 방향 선회.

6. 현존 국제 기준들과 부합하게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들에 대한 관리 및 감시, 감독, 통제를 개선.

7. [다른 경제 부문들과 함께 수산 부문에 혜택을 주는 불특정 정책들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또는 비규제 공해상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혜택을 줄 위험이 있을 경우, 수산 부문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부여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를 실시]

II. 다른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이 본 권고의 이행을 전파하고 지원할 것을 장려.

III. 사무총장이 본 권고를 전파할 것을 요청.

IV. 지지국들이 본 권고를 모든 정부 수준에 전파할 것을 요청.

V. 비지지국들이 본 권고를 고려하고 지지할 것을 요청.

VI. 수산위원회에게 다음을 지시함:

- a) 본 권고 이행 관련, 특히 국내법에서 IUU 어업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의 이슈에 있어서, 정보, 모범관행, 경험들을 공유하는 포럼으로서 기능하고, 관련될 경우 관련 기구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 b) 데이터, 분석적 연구, 이행 도구상자 또는 자발적 국가보고서 개발을 통해, 본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지지국들을 지원;
- c) 권고 채택 후 최소 5년 이내에 그리고 추후 매 10년마다 본 권고의 이행, 전파, 필요성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